

통하는
세상

통상

Vol. 132

tongsangnews.kr



마·중 무역갈등 이후 산업생태계의 변화

질문하기
무역 갈등에서 공급망 첨단기술로 확대된 미·중 갈등

깊이 보기
미국의 IRA 세부지침 내용과 한국 배터리산업의 미래

함께풀기
날로 심화하는 미·중 패권경쟁,
대전환 시대 생존법을 모색하다

통상의 세계 둘보기
2023년 미국의 통상정책의제,
무엇이 달라졌다

K수출 드라이브
단기성과 창출 맞춤형 지원 통해
수출 불씨 살린다

지구촌 연구소
북미 공급망 협력의 핵심,
USMCA

05

MAY. 2023

ESG 경쟁력 시대의 탄소국경조정과 배출권 거래



ESG

지난 4월 18일 유럽의회는 중요한 기후환경 법률들을 채택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개혁하며,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¹⁾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그중 CBAM은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가결됐다. 유럽의회는 CBAM을 “EU 산업을 보호하고 글로벌 기후 압박을 높이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글 임성택 법무법인 자평 ESG센터 센터장 사진 환경DB

탄소가격제도의 종류와 내용

탄소세

- 국내산 및 수입 상품에 모두 적용.
-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 부과.
- 간접세 형태. (ex.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 스웨덴, 캐나다, 스위스,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27개국 시행.(2021년 기준)

배출권 거래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해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량의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는 탄소세와 달리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결정됨. 기업이 배출량을 줄이면 추가적인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제도.
- 할당은 유상할당(유상으로 배출권 판매)과 무상할당(무상으로 배출권 분배)으로 나뉨.
- 전국 단위 실행 9개 국가, 지역단위 실행 19개 국가(2021년 기준)

탄소국경조정

-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탄소비용에 상응해 수입상품에 탄소비용 부과.
-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으나, EU는 배출권 거래와 연동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설계.
- EU 시행 확정. 미국, 벨기에, 캐나다 등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입법 폐기지 'Fit for 55'를 발표했고, 이번에 관련 법안들을 채택한 것이다. EU의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탄소가격제도를 살펴보자.

탄소배출에 가격을 매기면?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탄소가 배출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주체에게 이러한 비용을 부담케 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것이다. 탄소가격에는 세 가지가 있다.

이번에 승인된 EU ETS 개정안은 파격적이다. 배출량 감축목표를 크게 늘리고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적용 분야를 확대했다.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현재 EU의 무상할당 비율은 43%, 참고로 한국은 90%). 해상 분야를 포함하고 항공 분야의 무상할당도 폐지한다. 운송과 건물을 포함시켜 별도의 ETS를 적용한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다.

1)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언제한 기후규제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867억 유로를 조성해 도로운송과 건물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U가 CBAM을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전제돼 있다. EU 역내에서 탄소비용이 증가하면 ‘탄소누출(carbon leakage)’ 리스크가 커진다. 탄소누출이란 탄소규제가 심해질 때 국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역외 국가로 생산활동을 이전하거나, 가격경쟁력이 뛰어지는 EU 생산제품이 탄소집약적인 수입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CBAM이다.

유럽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CBAM은 기존 EU 집행위원회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CBAM의 적용 대상은 우선 6개 분야지만, 2030년까지 ETS 무상할당 폐지와 연동해 모든 ETS 대상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되지만 이른바 ‘전환기간’인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발생한다. 2026년부터 수입품의 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탄소배출은 통상 직접 배출과 간접배출을 구분하는데, 생산 단계의 직접배출 외에도 생산을 위한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간접배출까지 특정조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배출권의 주간 평균 경매가격에 따라 계산된다. 다만 원산지에서 탄소세나 ETS에 따라 탄소가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감면된다.

세계는 지금 기후전쟁 중

EU에서 시작된 기후규제는 다른 나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ETS를 개선하고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4월 18일 유럽의회 채택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EU 집행위(안)(2021. 7. 14)	구분	유럽의회 승인안(2023. 4. 18)
5개(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적용대상	6개(집행위(안) 대상 품목 + 수소)
2026년 1월부터	시행시점	2026년 1월부터
2023년~2025년(3년)	전환기간	2023년 10월~2025년(2년 3개월)
회원국 개별 운영	운영방식	중앙집중식 운영(중앙등록처 신설)
직접배출	배출량 범위	직접배출+특정조건에서의 간접배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1% 감축	ETS 감축목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2% 감축
2026년~2035년(10년)	ETS 무상할당 폐지	2026년~2034년(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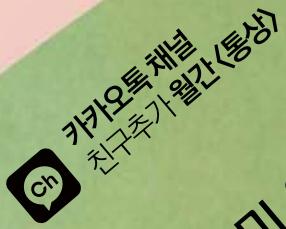
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특정 분야의 수입품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청정경쟁법(S.4355 Clean Competition Act)’ 및 ‘공정한 전환과 경쟁법(H.R.4534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이 그것이다. 캐나다, 일본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바아흐로 세계는 기후전쟁을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ETS를 개선하고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및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국제무역의 흐름에서 우리 기업들이 뒤쳐지지 않도록 탄소배출량 측정 지원부터 자탄소 제품 개발과 친환경 시장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들도 보다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ESG를 강화하는 것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것이다.⁶⁾

‘월간통상’을
검색하세요



웹진 월간〈통상〉
tongsangnews.kr



뉴스보다 쉽고 재미 있는
통상 이야기로 여러분과
통하는 세상을 업니다



SNS 채널도 꾸욱!